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026년 1차회의 정세브리핑(2026.1.31)

발제: 채민석

<팔레스타인>

○ 2023년 10월 7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의 사상자를 추적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최근 수치(1.27, <Al Jazeera>)

- 확인된 사망자: 20,179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최소 71,662명
- 부상자: 최소 171,428명
- 2025년 10월 10일 휴전 발표 이후 사망자: 최소 488명

○ 마지막 이스라엘 인질 귀환

- 하마스는 “점령 세력이 합의 위반을 멈추도록 중재국들과 미국이 강제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
- 네타나후 “가자지구 휴전의 다음 단계는 재건이 아니라 하마스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
- 중재국과 국제구호단체들은 가자지구에서 국외로 바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흐 국경검문소의 완전 개방을 압박.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인질 주검 전체 송환 없이는 열지 않겠다’고 버텼었는데 그 명분이 사라진 것에 따른 것(1.27, <한겨레>)
- 이스라엘은 마지막 포로와 15명의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교환(1.29, <Al Jazeera>)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집트로 연결되는 라파흐 국경검문소를 내달 1일(현지시간) 개방한다고 30일 밝힘. 검문소를 통한 가자지구 출입은 이집트와 협의 하에 이스라엘의 사전 보안 심사를 거쳐 유럽연합(EU) 대표단이 감독.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돌아가고자 하는 주민의 경우 전쟁 기간 가자지구를 떠난 경우에만 허용(1.30, <연합뉴스>)

○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발족

- 22일(현지시각) 기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행사장에서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이 열렸고, 19개국이 참여¹
- 유럽 국가들은 유엔을 대체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부터, 트럼프에게 쏠린 과도한 권한, 영구회원국이 되려면 10억달러의 헌금을 내야하는 점 등에 대해 우려
- 트럼프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1.23, <한겨레>)
- 트럼프가 맡은 평화위 초대 의장은 평화위 회원국으로 초청할 국가를 직접 결정할 권한과 모든 결정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 회원국들의 임기는 3년이나 의장이 재승인하면 연임할 수 있고, 의장이 제명권과 후임 의장 지명권도 가짐
- 헌장에는 “분쟁 지역에서 안정을 촉진하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라고 명시(1.18, <한겨레>)
- 평화위원회의 집행위원(집행위원회): 마코 루비오, 스티브 윗코프, 제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반대 의사 표명(1.18, <한국일보>)
- 하마스는 가자지구 통치권을 평화위원회 산하 가자행정위원회(NCAG)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힘. 트럼프는 지난 14일 평화계획 2단계를 선언하며 가자지구 행정을 맡을 팔레스타인 출신 전문 관료로 이루어진 가자행정위원회 설립(1.29, <한겨레>)

○ 이스라엘, 유엔기구 건물 철거 및 강제 이주 명령

¹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불가리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 AP 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아침 난민캠프 천막에서 생후 3개월된 여아 샤자 아부 자라드가 숨진 채 발견. 원인은 저체온증. 샤자는 가자지구에서 이번 겨울에 추위로 사망한 9번째 어린이. 휴전 이후 어린이 100명 이상이 공습 및 질병으로 사망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일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의 한 마을에 휴전 이후 첫 강제 이주 명령을 발동
- 같은 날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시설을 철거. 이 기구의 팔레스타인 직원이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입에 동참했다는 의혹 이후 퇴출 절차를 밟아 옴
-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49년 유엔 산하기구로 설립되어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구호활동 전개(1.21, <한겨레>)
- 이스라엘 정부는 국경없는의사회와 액션에이드, 국제구조위원회 등이 포함된 국제 구호단체 37개의 활동허가를 취소하여 1월 1일부터 활동 허가가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운영을 중단해야 함(1.1, <한겨레>)

○ 이스라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

- 12월26일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고 국교 수립. 소말릴란드는 1969 쿠데타로 집권한 시아드 바레 소말리아 대통령이 1991년 축출되자 분리독립을 선언
- 소말릴란드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후보지로 여겨지는데다 예멘과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견제 수단이기도 함
- 국제사회는 비판: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이슬람협력기구(OIC) 등. 현재로는 트럼프도 소말릴란드는 인정하지 않음(12.29, <한겨레>)

<미국 제국주의와 라틴아메리카>

○ 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 3일(현지시각)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한 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
-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석유 이권 보호, 마약 카르텔 소탕, 이민자 대량 추방이라는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분쟁이라는 분석
- 지난해 5월 트럼프는 자신의 역점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통과를 위해 쿠바계 의원들의 표가 필요했음. 마두로에 반대하는 쿠바계 의원들은 마두로 정권의 주요 외환벌이 수단 중 하나인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철수를 요구했으나 트럼프는 셰브론이 철수할 경우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우려. 이에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대한 이권은 유지하되, 베네수엘라에 군사적 타격을 가했다는 분석도 있음
- 또한 18세기 법령인 ‘적국 시민법’에 따르면 미국과 전쟁 중이거나 미국을 침공한 국가의 국민을 재판없이 즉각 구금·추방할 수 있는데, 이 법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필요(1.4, <한겨레>)

○ 트럼프, “정권 이양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

-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일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할 것을 지시
-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체포 직후 내각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았음
- 트럼프는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로드리게스가 미국에 협조할 것이라고 시사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베네수엘라 통치를 위해 미군을 파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1.6, <한겨레>)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로드리게스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관리로 미국 관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줘서 이미 몇 주 전 마두로를 대체하는 후보로 정했다고 함
- 사회주의 게릴라였던 아버지를 둔 로드리게스는 차베스 정부에서 일하다가 마두로 정부 출범에 기여. 미국의 봉쇄와 제재로 경제가 파탄나자, 경제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국내 경제 엘리트와 외국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신장
- 로드리게스가 미국에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군부 등 마두로 지지세력을 달래고 독립성을 보이려는 전략이라고 판단(1.4, <한겨레>)
-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납치 전부터 차베스가 시행한 국유화(특히 석유) 조치를 되돌리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시장을 내어 주는 정책을 추진해 온 대표적 인물로, 2018년 부통령 취임 뒤 그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국내에서 추진한 긴축 정책과(2020년부터는 재무장관을, 2024년부터는 석유장관을 겸임) 민영화는 식품 가격을 폭등시키는 한편, 공공부문 임금을 억제(1.13, <노동자연대>)
-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원주권 수호의 핵심 정책으로 여겨온 석유 국유화 조치를 공식 폐기하고 민간·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는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국회서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 구축된 자원 국유화 노선을 20여 년 만에 뒤집음(1.30, <중앙일보>)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이유

-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밝힌 서반구 패권 복원 전략을 본격화한 조치
- 미국 행정부는 마두로가 ‘미국의로 유입되는 마약 밀매 조직의 배후’라는 점을 들어 뉴욕에서 기소. 공소장에는 마약 테러리즘과 코카인 밀수입 음모 혐의 적시
-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가 공모한 ‘태양의 카르텔’ 등이 미국으로 밀수하는 마약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고 있고 대부분은 베네수엘라에서 온다며 공격을 정당화 했지만, 지난해 9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중 약 70%(약 7만 명)가 합성 오피오이드, 특히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약 3만 명). 게다가 미국 정부는 앞서 미국 유입 펜타닐의 거의 전부가 멕시코에서 생산되며, 화학 물질 원료는 중국기 주공급원이라고 밝힌 바 있음. 또한 미국에 도달하는 코카인의 90% 가량은 콜롬비아에서 생산(1.5, <한겨레>)
- 또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를 훔쳤다’고 주장. 이는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던 미국 기업 엑손과 모빌, 걸프오일(셰브론) 등이 타격을 입은 것과 연관. 이후 우고 차베스 정권이 2007년 베네수엘라 최대 석유 매장지인 오리노코 벨트 사업권까지 국유화
- 국제상공회의소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에 엑손모빌에 9억800만 달러(2012), 코노코필립스에 20억 달러(2018)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도 각각의 회사에 16억 달러와 8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베네수엘라는 이 금액을 대부분 지급하지 못함(1.5, <한겨레>)
- 트럼프는 4일(현지시각)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석유와 다른 자산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밝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에서 “수억 톤의 니켈과 보크사이트, 수천 톤의 금이 매장돼 있다”며 재건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의 전략 자원 전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1.5, <한겨레>)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국제 사회 반응

- 유엔 사무총장, 중국 외교부, 러시아 외무부,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규탄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은 지지
- 유엔 헌장 제2조 4항의 침략 범죄에 해당되고,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저지른 것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1.4, <한겨레>)

○ 트럼프 정부, 쿠바 정권 전복 추진?

-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트럼프는 “쿠바의 소득이 모두 베네수엘라로부터 왔는데, 이제 수입이 없다”며, 쿠바는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1.5, <한겨레>)
- 2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쿠바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몰아내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쿠바 정부 내부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
-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쿠바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차단해 쿠바 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 쿠바에서는 1994년과 2021년 두차례 반정부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1천 명 이상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미국 쪽에 협조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1.23, <한겨레>)
- 29일(현지시각)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쿠바 유입을 차단하고,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와 관련된 원유의 정유·수출·공급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중국·러시아·이란·쿠바와 연계된 거래는 제외하는 등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일반 허가를 발급(1.30, <중앙일보>)

<미국 제국주의와 그린란드>

○ 트럼프, “그린란드 필요”

트럼프는 4일(현지시각) 전용기에서 “우리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현재 그린란드는 온통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밝힘

- 그린란드: 면적 한반도 9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 덴마크 자치령으로 국방·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기능에서 자치권 행사.
- 지구온난화로 북극권 얼음이 녹으며 그린란드 주변 해역은 유럽·아시아·북미를 잇는 최단 항로로 각광. 트럼프는 이곳에 대한 영향력이 ‘적성 국가’로 넘어가선 안된다는 주장
- 또한 그린란드에는 석유·가스는 물론 반도체 등에 필수인 희토류가 풍부하여, 이곳을 차지하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압박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1.6, <한겨레>)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7개국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고 공동 성명 발표

○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 덴마크 요청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소규모 병력을 그린란드에 파견해 합동 방어·정찰 훈련을 진행
- 17일(현지시각)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요구에 맞서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²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
-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번 조치의 명분이라고 강조(1.18, <한겨레>)

○ 트럼프, 무력 사용 및 유럽 국가 관세 부과 철회

-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솔직히 말해 우리가 무력을 사용한다면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용권이 아니라,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권리와 지위” “그린란드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나토 전체의 안전과 직결”(1.21, <한겨레>)

²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 같은날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통해 그린란드, 나아가 북극 전체 지역과 관련한 미래 합의를 마련했다”며 2월1일부터 부과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힘(1.22, <한겨레>)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군 기지 설치를 위해 그린란드 일부 지역의 주권을 미국에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1.22, <한겨레>)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

○ 21세기 제국주의 ‘돈로 독트린’

- 먼로 독트린: 1823년 제임스 먼로 당시 미 대통령이 미국이 구대륙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테니 유럽 강대국들도 아메리카 대륙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밝힌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확인하는 선언
- 먼로주의는 냉전시기 소위 ‘공산주의 좌파’를 배제하며, 라틴아메리카를 미국의 안보권역으로 설정하여, 친미·반공 정권에 대해 지원(정권교체, 군사엘리트 양성[반공훈련], 초국가적 탄압[콘도르 작전]) 및 1989년 파나마 침공 등 미국 대외정책에서 주요했으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선순위에서 밀림
-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본토와 이 지역 전역의 핵심 지정학적 거점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서반구 밖 경쟁 세력이 이 지역에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및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
- 이를 기반으로 하여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캐나다, 쿠바, 콜롬비아, 멕시코에 대한 침공이나 협박으로 표현
-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보좌관 “힘에 의해, 세력에 의해 통치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태초부터 세계의 철칙”이라고 밝힘. 트럼프의 돈로주의는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고, 이는 강대국이 전세계를 분할한 19세기의 제국주의 열강 시대와 유사한 국제질서(1.8, <한겨레>)

○ 미,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 발표

- 중국을 “19세기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강력한 국가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전쟁이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되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은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입장.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며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한반도 관련해서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복무제를 갖추고 있어”“한국이 북한 억지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1.25, <한겨레>)
- NDS 공개 후 이재명 대통령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힘

<이란 반정부 시위>

○ 이란의 경제난으로 시위 시작

- 작년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뒤로 리알화는 약 40% 정도 가치가 하락한 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2.2%(12월 기준)까지 치솟음. 2015년 이란-미국 간 핵합의가 타결됐을 때에 비해 화폐 가치가 1/44 수준으로 폭락
- 12월28일부터 분노한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시위에 나서고, 지역 대학 8곳에서 항의 시위 발생(12.31, <한겨레>)

- 초기엔 경제 위기에 항의하는 시위였지만,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구호가 나오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이란이 시위대에 총을 쏘고 폭력적으로 죽인다면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려 나설 것”, 13일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고 주문(1.14, <한겨레>)

○ 이란 시위 소강상태

-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이란 신정 체제 이래 최대 규모의 전국 봉기 양상을 띠었던 이번 시위가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사실상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도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17일 엑스에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있어서 유죄”라며 시위대의 죽음을 두고 트럼프 탓을 함
-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탄압, 정부에 위협을 가하는 군부의 움직임 전무, 친 하메네이 국민들도 다수라는 점이 시위 소강의 원인이라는 분석
- 외신은 일부 시위대가 미국 쪽의 지원이 오지 않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1.19, <한겨레>)

○ 이란 시위 사망자 3,117명 공식 발표

- 이란 국영방송은 “순교자” 2,427명, “폭도, 테러리스트” 690명이라고 발표한 ‘참전용사·순교자 재단’의 성명을 보도
- 국외의 인권단체는 “이슬람 공화국은 국가 폭력 사망자 수를 체계적으로 축소 보고해 온 명확한 전례가 있다”며 실제 사망자는 최대 2만5천명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

○ 미, 중동에 항공모함 이동

- 트럼프는 남중국해에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이 말레이시아를 지나 중동지역에 진입한지 하루만에 또 다른 함대가 이란으로 이동중이라고 밝힘
- 최근 미군은 요르단 기지에 F-15E 전투기 12대를 배치하고, 패트리엇와 사드 방공 시스템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이란 주변에 군사력 집중(1.28, <한겨레>)
- 미국은 이란이 핵협상에 나서지 않는 경우 군사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모든 우라늄 농축의 영구적 중단과 현재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량 폐기’, ‘탄도미사일의 수량과 사거리 제한’,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을 제시했다고 보도(1.29, <경향신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 이민단속국 단속으로 미국 시민 사망

- 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국 요원이 단속을 피하려던 30대 여성 러네이 굿을 총으로 사살. 국토안보부는 즉각 성명을 내 숨진 여성이 단속 요원들을 차도 들이받으려 해서 “방어 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며 숨진 여성의 행위가 “테러 행위”라고 규정
- 미니애폴리스는 지난 2020년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이로 인해 흑인에 대한 경찰의 편파적인 법집행 및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1.8, <한겨레>)
- 12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세인트폴시는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주정부 권한을 보장한 수정헌법 10조를 위배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국토안보부는 소송을 제기한 미네소타에 이민단속 요원 1,000명 추가 파견 예정(1.13, <한겨레>)
- 24일(현지시각)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국경순찰대 요원이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를 총으로 사살.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중환자실 간호사이며 합법 총기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짐. 사건 직후 국토안보부는 프레티가 9mm 반자동 소총을 소지한 채 접근했다며 “방어

적인 발표“를 한 것이라 주장했는데 공개된 영상에서는 프레티가 총기를 꺼내들었다거나 공격하려는 듯한 모습은 찾기 어려워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1.26, <한겨레>)

○ 내란법 발동 가능성 제기

- 트럼프는 15일 트루스소셜에 “전문적인 선동꾼과 내란범들이 자신의 일만 하려고 할뿐인 이민 세관단속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내란법을 시행할 것”
- 내란법은 제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방 군을 국내 치안이나 민간 법집행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예외적인 법
- 시위는 이민단속요원이 미국 시민권자인 러네이 굿을 사살하면서 격화되었고, 13일에는 연방 이민단속요원이 교통 단속 중 달아나려던 베네수엘라 남성의 다리에 총격을 가해 부상
- 내란법이 발동된 가장 최근 사례는 1991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로드니 킹 폭행 사건 뒤 경찰관 4명 무죄 평결 이후 발생한 민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으로 사용(1.16, <한겨레>)

○ 트럼프 집권 2기의 중대 분수령이 된 미니애폴리스

-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서 “알렉스 프레티는 ‘국내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이번 사건은 ICE 전술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수준의 정치·도덕적 실패”라고 지적
-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참모진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추방을 계속 할 방안을 논의 중
-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고, 미국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지출법안을 저지하는 예산 투쟁에 돌입을 선언하며 연방정부 섀다운 가능성도 제기(1.26, <한겨레>)
- 이에 따른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29일 이 도시에 투입된 국경·이민 단속 연방요원 인력을 줄이는 감축하고, 대규모 순찰과 무차별 검거에서 ‘표적 단속’으로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힘
- 30일(현지시각) 이민세관단속국 축출 ‘전국 섀다운’이 벌어질 예정
-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미니애폴리스에 투입된 이민 단속 요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1.29, <중앙일보>)
- 30일(현지시각) 시위대가 미 전역 도시에서 미네소타 주 연방이민요원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섬.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에 항의하기 위한 “No Work, No School, No Shopping” 전국 행동의 일환(1.31, <The Guardian>)

<기타>

○ 트럼프, 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 요청

- 트럼프는 2027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현행보다 50% 이상 늘린 1조 5천억 달러(약 2,170조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6년 회계연도 기준 9,010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책정(1.8, <한겨레>)

○ 트럼프,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 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유엔 산하 31개 기구와 유엔 소속이 아닌 35개 국제기구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 여성기구,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국제 자연보전 연맹,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 베니스 위원회, 국제법 위원회, 유엔 인구기금, 글로벌 대테러 포럼 등이 포함

- 한편 국제 표준 논의에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1.8, <한겨레>)

○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금지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반발해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금지. 희토류를 포함하여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군사 분야에 쓰이는 중요한 전략 물자 포함(1.7, <한겨레>)

○ 일본, 중의원 해산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3일 중의원 해산 입장을 공식 발표

- 현재 중의원 전체의석 465석에서 자민당 199석, 일본유신회 34석으로 과반에 1석만 초과

- 다카이치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 헌법 개정, 강력한 외교·안보를 위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해 군사력 강화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힘 (1.19, <한겨레>)

- 야당에서는 '반(反)다카이치'를 위해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손을 잡고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결성(1.23, <뉴시스>)

- 일본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뼈대로 하는 '안보 3문서' 개정안을 올 여름께까지 마련한다는 목표

- 일보의 안보 3문서는 약 10년 동안의 일본 방위 기본 계획을 담은 문서로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견지했으나,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이를 깨고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 증액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목표를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것(12.29, <한겨레>)

-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비상시 자위대가 장기간 전투를 지속하기 위해 군수공장을 국유화해 민간 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올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때까지 일본군 육·해군 직할 군영 군수공장인 '공창'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1.25, <한겨레>)

○ 도쿄전력, 15년 만에 원전 재가동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자사 보유의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6호기 원자로를 재가동

- 총 7기의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고 출력으로는 단일 원전 기준 세계 최대 규모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당시 민주당 정부가 '원전 제로' 정책을 펼 이후, 전국 54기의 원전의 가동이 완전히 멈췄던 상태였으나 2012년 자민당 정부가 '원전 최대 활용'으로 방침을 변경

- 이번 재가동으로 일본에서 가동 가능한 원자로 33기 중 재가동된 곳은 15곳으로 증가(1.21, <한겨레>)

- 재가동 첫 날인 22일 핵분열 반응을 억제하는 제어봉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경보가 울려 작업 중단(1.22, <한겨레>)